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해명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담 당 자	조 성 조 사무관 (02-2100-2843)	
	금감원 감독총괄국장 이 준 호(02-3145-8300)		김 범 준 부국장 (02-3145-8001)	

제 목 :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[아시아경제 8.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아시아경제는 8.7일자 “금감원 직원 면책·제재 즉시통보’…금융당국, 인허가·제재 안 끈다”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
- “금융위는 인허가·검사·제재 3대 업무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‘금융감독혁신안’을 다음주 발표한다.”
- “인허가 불허시 금융당국이 신청자에 그 사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, 금융회사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채널도 운영한다.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,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렸습니다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